

이개호 '군급식 경쟁조달' 재고 요구

국방부, 농축수협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 방침 "급식부실을 공급체계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일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급식 개선방안과 관련 국방부의 경쟁방식 도입 방침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특히 이날 이개호 의원은 "군 급식 부실사태는 관리의 문제임에도 급식 공급체계 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군 급식을 경쟁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국내산 사용 원칙을 세우더라도 양념, 식자재,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이기 때문에 장비급식 질의 저하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경쟁이 강화될수록 납품자의 잦은 변경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가 힘들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급식 전체 조달 규모는 1조6천억 원 수준이며 농축수산물물은 6천억 원 수준



으로 전체 3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2024년 단계적으로 70·50·30%로 축소해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국산 농산물 사용 원칙과 지역 산 우선구매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경쟁방식의 시장조달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 위주,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납용 농축수산물을 값싼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납 가공식품에 대한 쌀 함유무 폐지 방침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전량 경쟁단계로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공급자인 농·축·수협과 농업·축산·어업인들의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 하다"며 "유예 기간을 5년 정도 더 연장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이형석 "2038 아시안게임 성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광주와 대구가 합심해 '2038 하계 아시안 게임'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대구시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양 자치단체가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은 '남·북이 함께 하는 민족적 이벤트가 돼야 한다'면서 '반드시 북측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당무위원들과 인사하는 송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송영길 대표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당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4강, 견제·연대 줄타기...崔·元에 쏠리는 러브콜

윤석열, 원에 호의적...홍준표·유승민,尹비판 공동전선

국민의힘 '4강' 대권주자들의 이합집산에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추켜세웠고, 홍준표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윤석열 검증'에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후보 간 단일화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12일 SNS에 별도의 글을 올려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는 원 전 지사를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

에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을 "흠결 있는 후보"라고 규정하면서도 원 전 지사에 대해선 "개혁·합리적 보수에 공감하는 후보"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이들이 원 전 지사를 향해 앞다투어 호의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현재 여론조사상 지지율로 선두권에 속하지 않은 원 전 지사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누구에 대해서라도 대통령 자격과 정책에 대해선 혹독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마이웨이 행보를 예고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각을 세우며 유 전 의원을 지원사격하는 듯한 흐름이다.

유 전 의원이 지난 11일 TV 토론에서 윤 전 총장의 '주술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과 관련, 홍 의원은 SNS에서 "허무맹랑한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국사(國師)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유 전 의원 편을 들었다.

일부에서는 두 사람이 지지율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을 넘어서기 위해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측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이들 4강 주자는 1,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주자들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외교통 박진 의원과 호남 출신으로 'DJ 적자'를 자임하는 장성민 전 의원을 영입한 데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최 전 원장 본인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재형 캠프 출신 김기철 공보팀장이 이미 윤석열 캠프에 공보부실장으로 합류한 상태다.

홍 의원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손을 맞잡는 데 이어 이날 이연주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 전 의원은 캠프에서 경기도와 부산 지원 역할을 맡는다. /연합뉴스

"사각지대 농인 약자들의 목소리 대변"

국감 인물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급식실 노동자 문제, 한국어 강사 문제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당국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실 환경에 맞는 환기시설 교체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급식실 조리사에 대한 산재신청 접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불안정한 신분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한국어 강사에 대한 실태 파악을 교육부에 요구한데 이어 대학기분역량진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국감도 이어갔다.

윤 의원은 특히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줄 세우기로 하위 몇 퍼센트를



걸러내는 방식으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교육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광주시의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AI 인공지능 교육연구원 설립 상황을 점검하고 광주가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살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전국화 사업과 관련 "전국 역사 교사 연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에 이어 사립대학등록금 동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의 위기를 진단하는 정책자료집 발간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감을 통해 지방사립대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서삼석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섬 주민 생명과 직결...인력·장비 보강 절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인 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섬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에 시스템 설치와 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섬과 선박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지난 5년 간 총 2천422건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활용됐다. 이 중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52%(1천250건)의 이용률을 보였다. 섬지역의 적은 인구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활용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의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로는 135명으로 정원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밖에 현장 인력도 부족한 현실인데, 행정 직원으로 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다. 현재 함정에 설치된 원격응급의료 장비의 사용 연한은 9년에 불과한데, 신규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대다수가 소형 함정이라 현재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면서 "의료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그리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